

농협사료가격 5.5% kg당 25원 인하

농협사료가 지난 5월28일자로 배합사료가격을 평균 5.5%(kg당 25원)를 인하했다.

농협사료는 지난 3월 1천500원선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1천240원대까지 안정됨에 따라 가격인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농협사료의 사료가격 인하는 올 들어 세 번째이다. 농협사료 관계자들은 지난 2월 kg당 25원, 4월 15.2원에 이어 이번 25원 인하로 올해 총 인하폭은 kg당 65.2원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사료 이명일 마케팅본부장은 “앞으로도 환율 하락을 예의주시하고 국제곡물가격과 연계해 인하요인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가장 먼저 사료가격을 내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학교우유 무상급식 두배로

내년부터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으로 개최하고 낙농진흥회가 주관한 제4회 학교우유급식 공무원 연찬회가 학교우유급식 관계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29일 양일간 천안소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찬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이성주 사무관은 학교우유급식 현황과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무관은 2010년부터 차상위계층 및 도서벽지 학생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는 저소득층 학생 45만4천명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학생 16만4천명, 도서벽지 학생 13만6천명 등 총 75만3천명으로 금년도 34만4천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도 금년도 216억원에서 내년도에

는 435억원으로 늘어나 지방비 186억원을 포함하게 되면 무상급식 예산은 총 62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이 사무관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오는 9월 10일 ‘세계학교우유급식의 날’을 기념해 학교우유급식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박진욱 사무관은 학교우유급식 저변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요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무상급식 대상 학생들이 수치심으로 인한 우유급식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유상급식과 함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난해 학교 우유급식률 반등

최근 몇 년간 감소 내지는 정체현상을 보여 왔던 학교우유급식률이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8년 학생 수 기준 급식률은 51%로 전년 50.5% 보다 0.5% 증가했다.

그러나 총 우유급식 학생 수는 줄어들었다. 2007년도 393만8천명이었던 우유급식 학생 수는 지난해 376만9천명으로 4.3%가 줄었으며 이는 저 출산으로 인한 총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무상급식 학생 수는 증가했지만 유상급식 학생 수는 줄어들었다. 무상급식 학생 수는 지난해 48만 명으로 6만2천명이 늘어났고 유상급식 학생 수는 332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19만2천명이 줄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급식률이 78.4%로 전년대비 1.6%가 늘어났고 중학교는 25.4%로 2.2%가 감소했으며 고등학교는 20.6%로 1.1%가 증가했다. 특히 저 출산으로 인한 총 학생수가 21만2천명이 감소했지만 우유급식 학생 수는 10만7천명 감소하는데 그쳐 초등학교 급식률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급식률 양극화 현상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대도시 급식률은 39.2% 전년 대비 4.1%가 증가했으며 중소도시는 3.4%가 감소해 59.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급식률 차이는 20.7% 차이로 전년도 21.8%에서 1.1%p 줄어들었다. 이 밖에도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의 57.2%였으며 급식 학생 수는 23.3%로 아직도 급식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일시적 원유 부족사태 올 수도

사육두수 감소 등으로 인해 원유 생산량이 하반기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유 부족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조심스럽게 흘러나고 있다.

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유제품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소비는 예상과 달리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착유우 두수 감소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원유 부족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9년도 1/4분기 중에는 전분기 대비 3.8%가 감소했으며 하반기에도 이 같은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3분기에는 4.6%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시유 소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감소에 비해 생산감소 폭이 더 커 원유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전망이다.

더욱이 여름 고온기가 최대 분수령으로 시유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일시적으로 원유 부족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업체의 경우 이를 대비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쿼터를 조정하거나 자사 소속 농기들에게 생산량 증대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길들이기식 보조금정책 안된다

농민단체들이 농림수산업 보조금(예산·기금·적립금 등)의 지원조건에 이의를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농축산물 소비 촉진 홍보비 44억원, 농민 교육훈련비 22억원, 도·농교류 협력사업비 17억원 등 83억원(자조금은 제외)을 보조금 명목으로 37개 안팎의 농민단체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민단체들에게 “본 단체는 올해 농림수산업 보조금을 신청·집행함에 있어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의결하면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지킬 것이며, 위반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납 조치하겠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불법 시위를 주축·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13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연합은 최근 ‘코드 맞추기식 국고보조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을 근거로 불법 시위에 참여할 경우 국고보조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건전한 운동의 영역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마땅히 집행해야 할 예산을 마치 우는 아이에게 던져주는 떡고물인 양 생색을 내며 자신들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중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농민연합은 “그동안 농식품부가 농민단체에 지급했던

보조금은 결코 단체의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며 “코드 맞추기식 정부 보조금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태평 장관, 규모화된 품목조직·기업농 확대지원

장태평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지난 4월 7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농협중앙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축산경영학회 주관한 '2009 축산업의 장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축산업의 장기발전 방향'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정부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 기술, 금융, 시장 등 4개 분야에서 확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 대응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중소농가 중심의 지원 정책을 규모화된 품목조직과 기업농으로 확대하고 기술정책도 생산 중심의 정책에서 품종·가공·유통·경영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것이다. 금융의 확장은 현재 소규모 분산된 '실핏줄 금융'에서 대규모로, 시장정책도 내수 중심에서 내수와 수출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은 현재의 중소 규모로는 시장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조직화를 통해 규모를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장 장관은 이와 관련 한우 농가를 예로 들며 한우 200~3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앞으로 500~1,000마리 규모로 늘려야 하며 기업농의 경우는 각종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농업이 구조적으로 보면 열악한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제조업도 모든 분야에서 다 국제 경쟁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밀, 콩, 옥수수 등 토지와 노동력을 기반으

로 한 농업은 우리가 뒤쳐질 수밖에 없지만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으로 추진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랙터 안전사고 64% 4~6월 발생

농기계 안전사고의 35%가 4~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이중 경운기 사고가 23%, 트랙터 사고 12%, 기타 농기계 사고가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랙터의 경우 이앙철 경운·정지·운반 작업 등이 집중되면서 4~6월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율이 6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에 따르면 농작업사고 유형중 발생빈도가 가장 많은 것은 전도와 추락으로 각각 28.3%와 23.9%를 보였으며, 농기계 교통사고는 차량운전자 과실로 농기계가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농작업 사고 원인은 주로 부주의가 전체사고의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운전미숙 21.7%, 열악한 작업조건 13%, 음주 6.5%, 기계고장 2.3% 등의 순이다. 또 농기계 교통사고 중 농기계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주원인은 주로 상대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59.2%를 보였으며 부당한 앞지르기 14.5%, 음주운전이 1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유가 인상 우유소비에 영향 적어

기본원유가 인상 이후 우유 소비감소가 우려됐지만 감소폭이 크지 않아 일부 유업체들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원유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고 있다.

최근 파스퇴르는 자사 소속 농가들에 대해 기본쿼터는 유지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됐던 조정쿼터에 대해 5월과 6월 평균 유량을 산출해 재조정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파스퇴르 관계자는 “하반기 원유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농가들은 5월과 6월 중 가능한 많은 양의 원유를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연세유유도 지난 4월 하반기를 대비해 기본 쿼터를 5%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잉여원유 가격도 600원을 적용시켜 농가들에게 가능한 많은 양을 생산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또 일부 유업체의 경우 자사 물량이 부족해 타 유업체로부터 원유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원유가 인상 이후 소비감소를 우려해 연초 기준원유량을 감축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소비 감소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게 유업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유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원유가 인상 이후 경기침체와 맞물려 큰 폭의 우유 소비 감소가 우려됐지만 우려했던 것 만큼 줄지는 않았다”라며 “또한 지난해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낙농가들 육성우를 도태시키는 등 생산여력도 크지 않기 때문”고 말했다.

원유·유제품 생산·수입량 증가

유제품의 소비가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지난 3월 원유 및 유제품 생산과 수입량이 증가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3월 시유 일생산량은 전월대비 13.8% 증가한 4741톤을 기록했고 발효유는 13.8% 증가한 1,319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치즈 수입량은 3.6% 증가한 3,739톤, 버터수입량은 158.9% 증가한 453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개학으로 학교우유급식물량 및 소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3월 백색시유 일 소비량은 전월대비 13.1% 증가한 3,879톤, 가공시유는 17.3% 증가한 862톤, 발효유는 12.2% 증가한 1,284톤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3월 일평균 원유생산량은 전월대비 1.2% 증가해 5,944톤을 기록했으며 낙농가수는 전월대비 30호

가 줄어든 7,240호를 기록했다.

우유 '끼워팔기' 다시 성행

일부 유업체에서 매출을 위해 여전히 우유끼워팔기를 시행해 시장질서를 흐리고 있다.

낙농육우농가들이 유통시장 문란 등 국내 낙농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중단됐던 우유끼워팔기가 최근 들어 일부 유업체들이 판로개척 등을 이유로 재개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할당관세 축소 움직임, 업계 반발

정부가 세수감소를 이유로 하반기에 수입사료 원료의 할당관세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확보차원에서 지난해 19개 품목에 대해 적용해 줬던 할당관세 품목수를 대폭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라도 무관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같은 정부 운용방향에 대해 관련업계는 양축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사료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당관세를 축소할 경우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 결국 양축농가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 추산 결과 지난해 할당관세 적용으로 전체 사료시장 7조 2,000억원의 2.6%의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는 이에 따라 한·미 FTA와 한·EU FTA 등 시장개방 여파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의 가뭄이나 어려운 상황에 할당관세까지 축소할 경우 업계는 물론 농가들의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며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 수량 등을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㉞

(출처 : 축산신문, 농축산신문,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등)